

## 이-팔 분쟁과 자국내 민주주의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19.06.04.

지난달 3 일 가자지구 분리장벽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청년 2 명이 폭발물 풍선을 날리다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 무장조직이 250 발의 로켓을 쏘아 이스라엘 민간인 4 명이 사망했다. 민간인 희생은 2014 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곧바로 공습에 나섰다.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무장조직원 27 명이 사망했다.

작년 한 해 가자지구발 로켓은 1000 발, 이스라엘발 공습은 300 회가 넘었다. 1948 년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이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을 둘러싸고 4 차례의 중동전쟁과 숭한 국지전이 있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기도 했으나 폭력은 형태를 달리하며 이어졌다. 이-팔 분쟁은 당사자 말고도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국가 간의 대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원하는 강대국 간 싸움으로 확대됐다. 194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 이어진 중동전쟁에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영국, 프랑스가 직접 참여했고 미국과 옛 소련연방이 깊이 간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5 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올해 3 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 국제법에 어긋난 행보였다.

이-팔 분쟁은 국가 간의 갈등뿐 아니라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로도 얽혀 있다. 국가는 한목소리를 내는 단일 행위자가 아니다. 한 나라의 대외행보는 치열한 내부 권력다툼의 결과이다. 여기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중요하다. 갈등을 풀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공익과 법치주의가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내부갈등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보수 리쿠드당과 쇠락하는 중도·진보 연합의 다툼이다. 4 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5 선이 유력했으나 우파연정

구성의 막판 결렬로 9 월 재선거가 결정됐다. 보수우파가 다시 이길 거란 전망이다. 매년 전 세계 200 여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최근 2 년 사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지수는 2 등급에서 4 등급으로 떨어졌다. 민주주의 수준이 공고화 단계에 들어간 나라치고 매우 빠른 하락이다. 작년 7 월 이스라엘 의회에서 유대민족국가법이 7 표 차로 통과됐다. 서안의 유대인 불법 정착촌은 묵인됐고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은 2 등 시민으로 전락했다. 올해 2 월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혐의 기소계획을 발표했으나 4 월 총선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이 보수우파를 택했다.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중도·진보 연합은 극우 민족주의의 폭주를 막지 못한 채 분열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한편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미국 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인 유대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이스라엘 보수우파 지지가 국익을 해친다고 본다.

팔레스타인의 내부갈등과 민주주의 수준은 훨씬 심각하다. 1967 년 결성된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를 떠돌며 무장투쟁을 벌이다 1993 년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고 서안에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를 세웠다. 1987 년 조직된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토착세력으로 급진 이슬람주의 슬로건 아래 PA 의 서구식 국가 건설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반대한다. 2006 년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둘 사이 대립은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PA 와 하마스는 비슷하게 권위주의적이다.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PA 통치하의 서안은 최악인 13 등급보다 2 단계 위인 11 등급, 하마스 통제하의 가자지구는 12 등급이다. PA 는 2006 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으며 반정부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를 탄압한다. 해외 원조금의 배분 관련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하마스는 여기에 더해 반대세력에 대한 감금과 고문도 서슴지 않는다.

가자지구 시민은 매주 분리장벽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반대 시위를 벌인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이다. 덜 알려진 사실이 있다. 같은 가자지구 시민이 하마스의 무능과 폭압에 항의해 내부에서도 시위를 한다.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빈도수와 언론 노출이 낮을 뿐이다.

\* 본 글은 6 월 4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